
일반논문

‘하위주체’와 4월 혁명
— ‘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과거사’의 상흔 치유와 효과에 대한 성찰

정치권력의 헌정질서 유보 및 파괴에 관한 연구
— 노태우 정권기까지 정치권력의 자유민주주의 파괴 및 도구화를 중심으로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

‘정치’로서의 공공성과 한국 민주주의의 쇄신

‘하위주체’와 4월 혁명

‘하위주체’의 참여형태를 통해 본 민주화에 대한 반성

이승원

서강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논문요약〉

이 글은 1960년 4월 혁명 과정에서 ‘수혜자’가 아닌 ‘타자’ 혹은 ‘인식되지 않는 자’로서의 ‘하위주체’가 역설적으로 특정한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과정에 대한 반성적이고 급진적인 이해를 끌어내려고 한다. 이 글의 시도는 1960년 4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하위주체’들의 존재양식 검토 및 정치적 의미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하위주체’를 중요한 정치분석의 대상으로 복원시키고, ‘민주화’로 대표되는 한국 정치변동의 특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하위주체(subaltern)’ 개념과 축적된 연구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위주체 연구가 정치변동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다.

이는 정치변동의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현대 민주주의 질서가 보편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임시적이며, 따라서 그 질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잔여’로서의 하위주체를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수반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글은 1960년 4월 혁명 과정에 참여한 하위주체의 참여형태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의 단초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글은 4월 혁명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향후 적용범위에 있어

서 한국 정치변동 혹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연구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4월 혁명에 대한 분석이라는 외형적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문제의식은 ‘하위주체’를 ‘민주적 잔여’, ‘이름없는 자’, ‘인식되지 못한 자’, ‘스스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 등의 용어와 등치시키면서 정치분석의 대상으로 복원시키고, 정치변동 분석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위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하위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의제들을 제도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지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어: 4월 혁명, 하위주체, 민주주의, 정치변동, 민주적 잔여, 인식되지 못한 자

1. 들어가며

이 글은 1960년 4월 혁명 과정에서 ‘수혜자’가 아닌 ‘타자’ 혹은 ‘인식되지 않는 자’로서의 ‘하위주체’가 역설적으로 특정한 정치변동과 민주주의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과정에 대한 반성적이고 급진적인 이해를 끌어내려고 한다. 이 글의 시도는 1960년 4월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하위주체’들의 존재양식 검토 및 정치적 의미의 재해석을 바탕으로 ‘하위주체’를 중요한 정치분석의 대상으로 복원시키고, ‘민주화’로 대표되는 한국 정치변동의 특징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은 ‘하위주체(subaltern)’ 개념과 축적된 연구물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위주체 연구가 정치변동과 민주주의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한다.

이는 정치변동의 과정을 통해 재구성되는 현대 민주주의 질서가 보편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임시적이며, 따라서 그 질서는 오히려 끊임없이 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참여’로서의 하위주체를 포섭하거나 배제하는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 글은 1960년 4월 혁명 과정에 참여한 하위주체의 참여형태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민주화 과정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의 단초를 제공하려고 한다.

4월 혁명에 관한 기존의 연구물들은 일반적으로 혁명 발발의 원인과 전개과정, 그리고 혁명이후의 정치사회적 변동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간헐적으로 ‘기층민중’, ‘도시빈민’, 혹은 ‘롬펜 프롤레타리아트’ 등으로 표현되면서 혁명 시기 나타났던 과격한 시위형태를 만들어낸 자들에 대한 일정한 언급과 기술은 발견되기는 하지만, 혁명시기와 그 이후에 나타난 이들의 존재 형태나 정치적 의미에 관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4월 혁명의 주도·참여세력에 대한 연구량이 많은 것과는 달리,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밤의 시위공간’을 주도하고 낮 시위의 과격한 양상을 이끌어온 ‘하위주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4월 혁명 연구 자료들 중 일부는 ‘하층 노동자’, ‘기층민중’, ‘도시빈민’, ‘양아치’, ‘무직자’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으나, 이들의 정치사회적 의미, 나아가 이들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는 4월 혁명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글은 4월 혁명의 과정과 혁명 이후의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하위주체들’이 ‘인식되지 않은 자’로 남게 되는 현상에 주목하고, 혁명의 참여자를 ‘인식된 자’와 ‘인식되지 않은 자’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통해 4월 혁명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해 새롭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단지 과거에 대한 재해석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 시기 민주주의와 민주화에 관한 연구에 적용시키면서 그 연구대상 및 의미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 자료를 검토해보면, 혁명 당시 사망자 직업의 경우, 19세 이상은 물론 초중고등학생 연령층 중에서도 상당수가 무직으로 분류된 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증언들과 사료들에 따르면, 시위의 과격한 양상, 특히 ‘밤의 시위 공간’에서 나타나는 참여세력의 형태들에 대한 묘사들을 볼 때, 하위주체들이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수준에서 기록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혁명 당시 밤의 공간을 지배하고, 낮 시위의 과격한 양상을 주도했던 하위주체들의 높은 참여 현상에도 불구하고, 혁명 이후 혁명의 성과와는 별개로 그들이 기존의 삶으로 대부분 되돌아간 현상으로부터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그 참여도와 달리 혁명 당시 ‘민주주의’ 기표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성’을 얻을 수 없었던 하위주체들은 이미 1950년대 절대빈곤의 공간에서 이승만 정권은 물론 혁명을 주도했던 도시 뿌리부르주아 세력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내에서도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으며, 결국 그들은 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개혁’의 공간에서도 여전히 수용되지 못했다. 또한 강력한 반공주의에 기반한 이승만 정권의 폐쇄적 사회구조 내에서 침체되어 있었던 노동운동, 농학연대, 통일운동, 진보정당운동 등이 4월 혁명 직후부터 1961년 5월 박정희의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폭발적으로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하위주체의 삶은 혁명 전과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들의 실천양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한계가 결과적으로 그들을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배제하는 현상에 대해 기존 민주주의 연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아가 현재의 시공간에서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프리즘에서 인식조차 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민주주의’는 어떤 답을 내려야 할 것인가?

어쩌면 본 논문은 4월 혁명에서 하위주체의 참여에 관한 분석이라는 의형적 틀을 유지하면서, 위의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보다는 이 질문

들을 구체화하고 다음 연구 과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위주체를 ‘민주적 잔여’, ‘이름없는 자’, ‘인식되지 못한 자’, ‘스스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 등의 용어와 등치시키면서 정치 분석의 대상으로 복원시키고 민주화 분석에 적용시킴으로써, 한편으로는 ‘하위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 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경험적 연구토대의 일부를 마련하려고 한다.

2. ‘민주주의’로부터 ‘하위주체’ 바라보기

이 글과 관련한 하위주체 연구를 ‘민주화’ 영역에 적용하는 가능성을 검토해보도록 하자. 하위주체 연구를 기존의 적용 한계를 넘어서 민주화의 이해 작업에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위주체의 개념을 정치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¹⁾

본 연구는 하위주체를 ‘민주적 잔여’, ‘이름없는 자’, ‘인식되지 않는 자’, ‘스스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 등의 용어와 등치시킨다. 이는 하위주체의 발화(發話)행위가 지배적인 재현 속에서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스피박의 주장과는 달리, 이름없고, 인식되지 않고,

1) 사전적 의미로 ‘하층민(a person of inferior rank)’을 뜻하는 ‘서발틴’ 혹은 ‘하위주체’라는 개념은 이미 20세기 초반 그람시의 『옥중수고』에서 처음 등장했다(Gramsci, 1992). 그람시는 하위주체의 동일화가 지배집단으로부터 끊임없이 방해받고, 따라서 예측된 집단으로서 그들의 역사는 단편적이고 삼화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독자적인 주도권을 행사했던 역사적 흔적들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후 ‘하위주체’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두드러지지 않다가 『서발틴 연구』의 창간으로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다. ‘하위주체’ 혹은 ‘서발틴’에 관한 기존 연구의 흐름과 논쟁, 그리고 초기 한국적 수용에 관해서는 김택현(1998; 2003), 우석균(2005), 스피박(1988) 등의 글을 참고하라.

스스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담론 구조 내에서 특정한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침묵이 하나의 언어행위인 것처럼, 하위주체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민중’이나 ‘노동계급’의 경우처럼 주체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적극적인 제기와는 다르다. 하위주체의 존재 자체는 오히려 권력의 성격, 지배 방식, 혹은 욕망의 실현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는 ‘판타지 구조’와 같은 타자의 ‘어떤 것’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²⁾

이런 측면에서 결국 하위주체는 ‘타자에 의한 타자’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는 여전히 ‘인식 불가능한’ 것으로 남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형태로든 혹은 무정형으로든 하위주체가 ‘존재’ 한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하위주체의 존재는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현대 정치권력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외부 혹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드러내는 ‘민주주의의 잔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하위주체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는 행위로부터 지배 질서의 또 다른 균열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비민주주의적 – 혹은 전체주의적 – 잔재들을 드러냄으로써 기존 민주적 질서의 재구성을 요청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하위주체를 ‘이름없는 자’, ‘인식되지 않는 자’, ‘스스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 등의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위주체가 분석되지 않는 이유, 즉 하위주체가 지칭하는 대상들을 하위주체라는 범주로 구분하면서 주요한 정치 분석의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해석

2) Jaque Lacan, *Ecrits*: 272 in Dylan Evans,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London: Routledge), 1996, 60쪽; Yannis Stavrakakis, *Lacan and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1999), Ch. 2, 46쪽; Slavoj Zizek, “Beyond Discourse-Analysis,” in Laclau 1990; Slavoj Zizek,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London: Verso, 1989), 127쪽.

자'의 관점과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전략적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개념들의 전략적인 사용은 하위주체가 지칭하는 대상들이 특정한 정치적 주체성을 표현하는 이름을 가지지 못한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이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분석을 위한 인식의 틀에서 제외시킨 '해석자'의 정치적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4월 혁명 분석의 경우, 기존 해석자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지젝(Slavoj Zizek)과 라클라우(Ernesto Laclau)의 연구작업은 이러한 이해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형식 민주주의의 전체주의적 한계와 그것의 환상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유지해온 지젝은 '민주주의 주체'를 근대적 인식과는 달리, 다양한 욕망에 기반한 상이한 경제, 정치, 사회적 차이들을 '폭력적인 추상화' 행위를 통해서 묵살시키고 '(인종, 성, 종교, 부, 사회적 지위를) 막론한 모든 사람들' 혹은 '구체적인 인간적 내용의 충만함이나 공동체적 결연의 순수성을 위한 공간'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채 'Geshellshaft'라는 원자화된 개인의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사회의 하나의 등가적 개체로 살아가는 자들로 규정한다(지젝 1995, 323-325; 이승원 2002). 다시 말해서, 이들은 '민주주의 주체'라는 하나의 '보편성(universality)'의 폭력에 의해 자신을 특징짓는 다양하고 상이한 역사적 경험들을 상실한 채, 하나의 산술적 개체로서 양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관점에서 지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존재불가능한 '민주주의 주체'에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자들은 억압과 착취가 은폐되어 있는 욕망의 구조, 즉 그 가치의 실현보다 모든 속임수, 부패, 민중 선동에 의한 지배 등을 가능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환상적 구조에 스스로를 엮어 버린 자들이며, 오히려 이러한 추잡함을 민주주의의 기능으로부터 제거한다면 현대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독설을 퍼붓기도 한다(지젝 1995, 323-325). 이러한 측면에서, 보편성이라는 논리를 무기

로 어느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족주의, 진보 등)을 전체주의적 질서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자들에게 ‘민주주의’는 그 전체주의적 질서에서 다양한 차이들의 보장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적대적인 대립이 ‘평화롭게’ 해소될 수 있는 환상적 기제로 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하위주체가 왜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 영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고, 인식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정치 변동의 동학을 반본질주의적 차원에서 ‘탈구’와 ‘적대’, 그리고 ‘헤게모니’의 개념을 동원하여 재해석하는 라클라우의 이론적 전개는 하위주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³⁾ 그에 따르면, ‘탈구’란 현 질서로부터 설명될 수 없는, 그리고 아직 어떠한 ‘인식-기호체계’에 의해서 표상되지 못하는 사건의 출현이다. 즉 존재하는 질서의 불가능성을 인식의 지평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탈구란 현존하는 대의체제가 대표할 수 없거나, 또는 기존 정치적 독해 코드로는 상징불가능한 어떤 것이 출현하는 계기이다. 따라서 탈구적 계기란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불가능성과 함께 그 질서의 전복의 가능성을 제공한다(Laclau 1990).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인식되거나 포섭될 수 없는, ‘결핍’ 혹은 민주주의의 ‘잔재’와 같은 ‘하위주체’의 존재가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인식 지평 위에 발생한다는 것은 기존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탈구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전태일의 분신 사망이나 1971년 강제이주된 도시빈민들의 경기도 광주 대단지 시위, 1979년 YH사건,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91년 강경대 사망 사건 등은 기존 질서 내에서 은폐되어왔던 ‘하위주체’의 존재를 알리면서 동시에 그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탈구적 사건이었다. 4월 혁명과 관련하여

3) 라클라우의 보다 구체적인 ‘탈구’ 개념, 그리고 아래에 언급될 ‘적대’ 개념에 대해서는 Laclau Mouffe (1985), 그리고 이승원 (2008) 참고.

3·15부정선거 그 자체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 민주주의’의 틀에서 해석가능한 ‘규칙 위반’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오히려 1960년 3월 15일 당시 마산에서 발생한 1차 마산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인한 마산 시민들의 사망과 부상, 그리고 2차 마산 시위를 필두로 4월 19일의 전국적 시위를 폭발시킨, 4월 11일 최류탄이 우측 눈에 박힌 채 발견된 김주열의 시신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충격은 기존의 절차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탈구적 사건이었다. 김주열을 포함한 당시 경찰진압에 따른 사상자의 증가는 4월 혁명의 참여자들이 이승만 정권을 절차적 민주주의의 규칙에 따른 ‘집권의 경기’에서 더 이상 경쟁의 대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리고 이승만 또한 자신의 합법적인 정치권력을 더 이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방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요컨대 위의 탈구적 사건들은 사건 당시의 인식 지평이나 정치 논리로 설명될 수 없었던, 따라서 기존의 정치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부정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들은 또한 당시의 하위주체 혹은 여러 사회적 정체성들을 중심으로 얽혀 있던 대중들이 사실상 당대 정치 질서와 사회적 관계가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사회적 외상이었다.

이 탈구적 사건들을 다시 기존 질서의 붕합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와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질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붕합 혹은 재구성’을 위한 ‘사건해석’을 둘러싼 투쟁은 ‘적대’의 차원에서 진행된다. 탈구적 계기를 통해 특정한 정치적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욕망의 실현이 기존 질서에 의해 불가능해진다는 인식 속에서 발생하는 적대란 기존 사회적 질서의 탈구에 대한 담론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Torfin 1999, 129). 이는 적대란 특정한 질서 혹은 사회구조의 한계와 결정불가능성을 드러내는 탈구적 계기의 정치적 귀결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적대의 확장은 새로운 질서 수립 혹은 정치 변동을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서의 정치전선을 구성한다. 4월 혁명 당시 ‘독재 대 민

주주의' 라는 적대적 정치전선의 형성은 당시의 대중들이 이승만 정권을 단지 경고나 일시퇴장과 같은 경기 내 벌칙을 통해 여전히 절차적 민주주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선거 게임'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와 반윤리적 학살을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완전히 민주주의의 공간, 즉 정치적 권위를 위한 합의의 상대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철회, 다시 말해서 이승만 정권의 축출을 의미한다.

농치지 말아야 할 것은 탈구적 사건에 대한 담론적 대응으로서의 적대의 형성과 정치전선의 구성 과정에서 수동적이거나 주변적일 수밖에 없는 하위주체들의 모습이다. 지젝과 라클라우의 이론적 비판이 하위주체들의 정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적 실마리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왜 ‘언제나’ 그들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젝의 비판을 상기해보면, ‘민주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 그리고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정치전선이 새롭게 구성되는 과정은 이 과정을 주도하는 헤게모니 세력에 의해 ‘언제나’ 잔여를 수반할 수밖에 없으며, 그 잔여는 ‘언제나’ 하위주체/이름없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⁴⁾

결국 하위주체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가에 대한 문제, 혹은 특정한 대상이 ‘하위주체’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문제는 그 대상의 존재와 실천 양태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정치적 효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해석하고 분류하는 ‘해석자들’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하위주체가 ‘언제나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해석자들’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전자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혹은 존재에 대한 인식은 바로 그들을 하위주체로 분

4) 이 지점이 특정한 대상을 ‘민중’으로 정의하는가와 ‘하위주체/이름없는 자들’로 정의하는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민중’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주체 개념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스스로가 아니라 해석자의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 이들의 능동개념은 없다.

류한 ‘해석자들’의 관점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석자들’—혹은 특정한 정치전선을 주도하고 그 결과로서의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체계모니적 주체들—의 정치적 특징, 그리고 그들의 주도로 재구성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4월 혁명’이라는 제한된 시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이 시공간 내에서 ‘하위주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 시기 민주주의와 민주화 연구의 대상과 영역의 확대에 기여하려 한다.

3. 4월 혁명에서 ‘하위주체’를 인식하기

4월 혁명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혁명의 주도세력이자 주요 참여세력을 학생, 지식인 그리고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 계급 혹은 도시 ㅼ때 부르주아지라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규정하지 않는다. 현재는 물론 당시에든 한국에서의 도시 ㅼ때 부르주아지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모델을 직접 수용하고 정치 권력의 장에서 지식인 엘리트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

고등교육의 기회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지적 경험은 도시 ㅼ때 부르주아지가 당시의 이승만 정권을 자유 민주주의의 렌즈를 통해 적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 기표로 기능하였던 4월 혁명의 공간에서 ‘도시 ㅼ때 부르주아지’와는 달리, ‘노동자’, ‘농민’과 같은 다른 계급세력들은 4월 혁명의 공간에 정치적이고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월 혁명 전 우익경향의 한국노총에 맞서 진보적 노동운동 세력들이 전국 노동조합 평의회를 구성하기는 했다. 그러나, 미군정하에서의 1946년 9월과 10월에 걸쳐 발생한

노동자, 농민들의 항쟁이 좌우갈등의 첨예한 대립 아래에서 폭력적으로 진압되고, 이후 한국전쟁의 휴전 상태에서 거대하게 형성된 남한의 반공주의 정치사회 질서와 ‘모든 죽은 세대들의 전통에 대한 악몽’ 과도 같은 반공주의 의식구조에서 노동자, 농민들이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적이고 진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김동춘 2000; 조희연 1998; 최장집 1996; 이승원 2008; Marx 1983, 103).

이는 해방 직후 남북한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정국을 주도했던 세력과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방 직후 국가수립의 과정에서 미군정과 한민당 세력과 첨예한 헤게모니적 정치투쟁을 전개한 세력은 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 조선공산당 등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정치노선에 기반한 전문 정치집단과 노동, 농민, 여성, 문화진영 등의 계급과 이해관계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일종의 동맹그룹이었다. 이 동맹그룹들이 미군정 시기로부터 한국전쟁을 거쳐 전쟁 이후 ‘반공규율사회’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겪은 ‘공포’와 ‘숙청’의 경험은 이들이 거리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김동춘 2000; 조희연 1998; 최장집 1996; 이승원 2008).

반공주의적 억압질서와 레드 콤플렉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최정점에 이르렀던 한국전쟁 직후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들의 계급 정체성을 동원하여 혁명의 공간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당시 남한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들은 농촌사회의 붕괴와 급속한 도시유입으로 인해 생존적 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혁명의 외곽지역인 ‘시골’에서 정치라고는 모르는 평범한 농사꾼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4월 혁명 당시 노동자들과 농민들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적대감을 뼈뼌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기표 속으로 환원시키고 자신들의 정치투쟁을 도시 뼈뼌 부르주아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4월 혁명 당시 거의 독점적인 언론매체였던 신문을 통해 알려진 혁명의 주도세력이자 대다수의 참가자는 ‘학생’이었다. 3·15부정선거 당시

마산 시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시위, 고등학생이었던 김주열의 죽음, 4월 18일 고려대학생 시위 및 용역강패들에 의한 집단테러, 4월 24일 서울 지역 대학교수들의 시위 등 제1공화국의 붕괴로 이어지는 4월 혁명의 극적 전환의 매순간에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에 의해 혁명의 매순간은 주도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급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 농민도 노동자도 혁명의 공간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혁명의 주요 세력은 학생 중심의 도시 뿌리 부르주아지였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사상자와 관련한 여러 통계들을 확인해 보면, 혁명의 주요세력이 학생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시 언론은 학생들의 시위참여를 중심으로 4월 혁명의 과정을 보도하였고, 학생 이외의 다른 사회 계층에 기반한 참여자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던 것은 혁명 당시 주요 사건에서 발생한 사상자와 관련한 통계보고를 통해서가 유일했다. 혁명 과정 당시의 주요 사건별로 언론 보도 등의 통계보고를 근거로 참여자들을 정리한 내용은 <표 1, 2, 3>과 같다.

당시의 취재상황을 고려해보면, 신문사별 혹은 보도 시점에 따라 발표된 부상자 수는 약간의 오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오차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전체 분포도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참가자들의 모습들이다. 당시 신문 1면은 물론 당일 대부분의 뉴스가 주목했던 참가자들은 ‘학생’들이었다. 당시 시위의 주요한 대립구도는 학생들과 이승만 정권 양자 사이에서 형성되었고, 이 구도의 변화가 4월 혁명의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에 당시 신문 1면은 물론 대부분의 언론이 주목했던 참가자들이 ‘학생들’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기반으로 혁명의 주체가 학생들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혁명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 참여 사상자들(1, 2차 마산시위 부상자 및 4월 혁명 전체 사망자)의 직업분포들을 살펴보면 언론을 통해서 기술된 주요 시위 참가자(학생)들과 다른 참가자들의 모습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와 2차 마산시위 기간 중 발생한 전체 부상자 272명 중 학생의 경

〈표 1〉 제1,2차 마산시위 부상자들의 직업

직업	제1차 마산시위 부상자수	제2차 마산시위 부상자수	합계
군인	2		2
공무원	1		1
교사	1	1	2
직공	5	1	6
점원	4	6	10(3,7%)
상업	3		3
하숙집근무	1		1
급사	1		1
학생	21	21	42(15,4%)
무직	30	122	152(55,9%)
적십자역원	3		3
노동자		23	23(8,5%)
공장직원		3	3
재단사		2	2
운전사		1	1
미상	9	11	20(7,3%)
합계	81	191	272(100%)

자료: 이은진, 1999년 10월, “1960년 3·15밤의거,” 『3·15의거』 7호, 93-121 및 Q. Kim, 1983, *The Fall of Syngman Rhe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p.74를 참조로 재구성함. 표의 직업분류는 당시의 사회적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

우 42명으로 전체 부상자 비율에서 불과 15.4%만을 차지하는 반면, 노동자, 점원, 재단사, 급사 등 어느 정도 생계를 위한 직업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무직자의 비율은 55.9%(152명)로 전체 부상자의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 참고). 또한, 시위가 보다 더 과열된 2차 마산시위의 경우 무직자의 부상자 비율은 전체 부상자 대비 69.2%를 차지하여 (학생 희생자 비율은 12.5%), 1차 마산시위에 비해 무직자 부상자

〈표 2〉 2차 마산시위 도중 부상자의 연령 및 직업분포

연령	학생	무직자	회사원 및 학원	계(%)
12-15	5	5	0	10(5.9)
16-22	15	63	14	92(54.4)
23-30	1	20	6	27(16.0)
30초과	0	29	11	40(23.7)
계(%)	21(12.4%)	117(69.2%)	31(18.3)	169(100)

자료: Q. Kim, 1983, *The Fal of Syngman Rhe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p. 74

〈표 3〉 4월 혁명 사망자 직업분포

직업	사망자수	%
초등학생, 중학생	19	10.4
고등학생	36	19.3
대학생	22	11.8
회사원 및 학원	10	5.4
하층노동자	61	32.8
무직자	33	17.7
미상	5	2.7
계	186	100.0

자료: 김운태, 『해방30년사』 2권, 한국사료연구소 편, 1976, 224-225쪽의 명단을 표로 재구성(박찬호 1991; 정창현 2006)참고

비율이 현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표 2〉 참고). 주목할 만한 것은 2차 시위 당시 16세 이상 30세 이하 무직자 부상자 수가 83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1%, 그리고 전체 무직자 대비 71%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당시의 시위가 점차 유혈적인 대립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직업을 가졌거나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

하고, 오히려 사회의 질서와 통제에 부정적이며 탈/불법적으로 저항하거나 방황하는 젊은 층들의 참여가 높았으며, 이들의 참여가 시위의 양상을 점점 격렬하게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전체 4월 혁명 사망자 직업분포를 보더라도, 전체 사망자 186명 가운데 하층노동자와 무직자 사망자 수가 94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의 전체 사망자 수는 77명으로 전체 대비 4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4월 혁명 사망자가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테러 및 4월 19일을 시작으로 대규모 학생 참여와 동시에 혁명의 최고 유행적 대립 시기 발생한 사망자를 포함한 것을 고려한다면, 소위 하층노동자와 무직자로 분류되는 하위주체들의 참여는 언론이 ‘인식하는’ 모습과는 달리 대단히 높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4월 혁명 당시 희생자와 관련한 통계자료가 여러 연구를 통해 인용되면서, 그 속에서 ‘하위주체’ 들은 한편으로는 계량적 의미에서 ‘숫자’ 에 불과한 외피를 쓰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도 말하고 싶은 비밀이 많은 비밀코드처럼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시위 당시 무엇을 했고, 그리고 혁명 이후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가, 나아가 민주주의 혁명으로서의 4월 혁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그들에게 혁명과 민주주의는 무엇이었는가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숨겨진 그들의 비밀코드에 대한 연구는 4월 혁명에 대한 연구작업들에서 대단히 미흡할 뿐이었다.

기존의 몇몇 연구들은 4월 혁명 당시 참여한 하위주체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1984년에 발표된 김성환의 글은 당시 시위 참가자의 사상자 통계에 기반하여 ‘도시빈민층’ 을 4월 혁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실업자, 피구호민 및 제3차 산업의 불완전 취업자들’ 인 이들이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이유를 ‘생존 그 자체의 극한적 상황과 존재의 부동성 및 아노미 상태’ 라는 이들의 존재

상태로부터 찾고 있다(김성환 1984, 50).

또한 한상진(1990), 박찬호(1991) 등 1990년대 초반의 연구물들도 ‘하위노동자’와 ‘무직자’라는 하위주체들의 참여모습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한상진은 이들을 ‘기층민중’으로 표현하면서 4월 혁명 당시 이들의 참여를 ‘민중’의 정치적 재등장으로까지 의미부여를 하고 있을 정도였다.

1990년대 말에 발표된 정용욱의 글은 주로 도시빈민층에 속하는 시위 속의 하위주체들이 ‘밤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4월 혁명의 양상을 격화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분석하면서, 1950년대 농촌의 피폐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가난한 이농민들이 주류인 이들의 사회경제학적 형성과정, 존재형태 그리고 의식상태 등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반성적 결론을 내리고 있다(정용욱 1998, 238).

2006년에 발표된 정창현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하위주체들의 모습에 주목하나, 여전히 그들의 ‘모습’에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은 4월 혁명과정에서의 ‘하위주체’에 대한 학술적 인식이 사실상 처음 언급된 김성환의 글이 1984년에 발표된 것과 비교해 볼 때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주체에 대한 연구가 정체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백으로 평가될 수 있다(정창현 2006, 31).

‘하위주체’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고백적 분석은 한편으로 하위주체들이 연구대상으로서 대단히 중요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숫자를 통해 존재가 알려진 혁명과정에서의 하위주체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남는다. 이들을 묘사한 또 다른 기록물은 이러한 해석의 과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혁명 당시 시위에 참가한 하위주체의 모습들이 통계적 숫자 이외에 전혀 기술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언론보도를 통해서서는 아니었다. 숫자가 아닌 이들의 존재가 기술된 곳은 바로 국회 속기록이었다.

(표 4) 국회 마산사건 조사위원회 속기록 증언내용 일부

증언장소	증언일시	증언자	직업	증언내용
국회 마산사건 조사위원회	1960년 3월 26일	박세현 22세	운전수	3월 15일날 저녁에...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남극장으로 해서요...환자들이 30명 총에 맞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연방 죽는다고 그러니까...걸어서 어디로 갔는데 해변가로 갔습니다. 이렇게 사회사태가 불안하고 하니깐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안될 뿐 아니라 가정의 생각을 하니깐 부모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에 제 자신으로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 저런 고민해서 바람을 쐬러나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군 헌병대앞 조금 나가면 모래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염없는 바다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혼자 먹여 살리나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국회 마산사건 조사위원회	1960년 3월 26일	김무남 21세	식품가공소 점원	3월 15일날 오후 8시경 청과시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무심히 걸어 가는데 어두운데서 손들어래 그러고 총을 거꾸로 쥐고 총대를 얼굴에 때리는데 웃입술은 짝 찢어졌습니다
국회 마산사건 조사위원회	1960년 3월 26일	경남도경 김경술 경술	수사과장 (총경)	현재까지 경찰에서 취급한 사건 관련자를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232명 중 중고등학교 학생 신분이 58명이고, 50명이 무위도식하는 무직자이고 잔여는 직공 또는 소규모의 상인 등입니다
국회 마산사건 조사위원회	1960년 3월 27일	이학만	공장에서 일하는 이정부 (17의부)	15일날 공장일을 하러 갔습니다. 삼화철공소 공장일을 하고 한 6시 반쯤 되어서 저녁을 먹고 제 어머니 [오늘 남성동파출소에서 큰일이 났으니 위험하니 나가지 말라고 말하니깐, 나도 앞니대 하고 예사로 평소에도 우리 애가 밖에 잘 나갑니다. 그때 나간 애가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회 마산사건 조사위원회	1960년 3월 27일	김봉두	김호덕(19) 나이무 공장 작공의 조부	일곱시반 여덟시 뭇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못나가게 붙잡았습니다. 붙잡으니깐 자기 어머니 데리러 간다고 나갔습니다. 아홉시쯤 되어 가지고 찾아다녔습니다

자료: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표 4〉에서 보듯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전 사회적인 쟁점이 되어버린 3·15 마산 1차시위에 대한 국회 ‘마산시위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속기록은 적지 않은 수의 마산 시민 측 증언자들이 학생 및 학교담당자뿐만 아니라 운전수, 직공, 점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 당시 상황에서 비조직적으로 참여했던 ‘무산자층’이었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이들의 증언은 시위에 대한 진압이 대단히 무자비하고 무원칙적이었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시위참여자가 결코 조직화된 학생들만이 아니었음을 숫자가 아닌 다른 형태로 보여준다.

특히 언론보도에서 기술된 참여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당시 마산 사건 진압에 참여했던 경남도경 수사과장 김경술 총경의 증언은 혁명에 맞선 현장의 진압자들이 ‘느끼고 경험한’ 참여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김경술의 증언에 따르면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학생들이 아니었다. 시위의 성격이 철저적 민주주의의 렌즈를 통한 독재자에 대한 저항이라는 ‘인텔리’적인 것이었다 하더라도, 시위의 양상을 과격하게 만들고, 시위를 진압하는 권력자들의 ‘폭력적 성격’을 드러내어 혁명의 결과를 만들어낸 자들은 그러한 ‘인텔리’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그와는 대비되는 무산자층, 무직자, 하층노동자 등 ‘인텔리’의 틀 안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하위주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언론보도나 학자들의 일반적인 연구보다 통계상에 나타난 사상자들의 ‘숫자’가 희생자의 가족이나 진압자의 증언과 만나면서 드러난 사실에 비춰볼 때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당시 시위참여자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하위주체)이었으며, 따라서 4월 혁명에 대한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성급히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이 묘사하는 참가자와 통계가 말해주는 참가자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은 적어도 두 가지 분석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한 가지는 시위의 성격이 아닌 ‘양상’을 주도한 자들은 학생들이 아닌

‘무직자’, ‘하층노동자’로 분류되는 비조직적 참가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적어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이 복장상태나 기타 외모를 고려하려 차별적으로 특정 계층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예를 들어 ‘조준 사격’)이 아닌 한, 몽둥이나 총기류 등을 통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행사에 의한 사상자들은 대부분 시위대의 선두 혹은 경찰과 직접 부딪치는 지점, 즉 시위대와 진압 경찰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가장 긴장되는 전선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는 상식에 따르면 그 ‘전선’에서 시위의 양상을 주도한 자들은 학생보다는 하위주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마산에서 발생한 1차, 2차 시위의 급진적 형태와 4월 18일 고려대학교와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시위가 4월 19일 전국적 항쟁으로 전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들의 조직적 참여가 우선적인 이유였다. 이와 함께 하위주체들의 시위결합과 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전개해 나간 억압세력의 무장을 해체시킬 정도의 급진적인 시위형태는 결국 시위대와 독재정권 사이의 대립을 화해불가능한 적대적 대립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학생, 지식인들의 설득력 있는 호소력이 결합된 조직적 시위와 이들이 만들어낸 시위공간에 부정형적으로 참여한 하위주체들의 자발적이고 급진적인 시위는 서로 불과 기름의 관계처럼 작용하면서 시위를 혁명의 성격으로 발전시켜 나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이 비조직적인 참가자들, 다시 말해서 직업군으로 보았을 때 하위주체에 속하는 자들은 위의 분석적 판단이 제기한 그들의 참여형태와 참여양상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혁명 기간 중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이 도시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빈곤층 혹은 도시 빈민자들이었고, 사회경제적 차별과 절대빈곤이라는 고통에 대한 대단히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불만은 혁명 당시 ‘부정선거 규탄’이라는 절차 민주주의적 요구에 흡수·용해될 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혁명 이후에도 장면 정권의 미온적 정책은 물론 탈독재적 열린 공간에서 학생들의 ‘농촌계몽화’, ‘학원자주화’, ‘평화

통일운동' 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의 복원을 위한 폭발적인 노동조합운동 그 어느 영역에서도 하위주체들의 존재를 여전히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혁명 이후 그들은 혁명 이전 자신들의 '아노미적' 상황으로 되돌아 갔으며, 혹은 1961년 박정희의 쿠데타 이후 이들의 일부는 군사혁명위원회의 '강패숙청', '사회정화', '국가재건' 등의 목표를 위한 가장 직접적인 희생자들로 전락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하위주체들은 그 참여형태와 양상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으며, 혁명 이후 다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는가? 독재정권이 몰러난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에서조차 그들의 존재가 인식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가 향후 필요함을 전제로 그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자면, 그들은 그 참여의 '무리' 에도 불구하고 파편적이었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민주주의' 라는 자신들의 언어를 통한 자신들의 주체성 혹은 대표성을 가지고서 혁명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언어(타자들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든 자신들 내부의 소통을 위한 것이든)와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들의 언어는 '과격성' 이었고 그들의 주체성은 부상 또는 죽음이라는 '희생' 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들은 그 어느 세력이나 제도도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의 대표성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21세기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 하고 있는 하위주체들이 스스로의 언어와 스스로의 주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적어도 '민주주의' 라는 공간은 이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 가장 적극적인 참여형태와 양상을 보인 4월 혁명시기의 참여자들이 혁명 이후 민주주의의 공간에서 사라지거나 배제되었다면, 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공간' 을 어느 수준에서 '민주적'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들은 영원히 민주주의의 외부에 남겨지거나 민주주의의 외상(trauma)에 불과한 회복불가능한 혹은 제도적으로 승인과 보호가 불가능한 대상에 불과한 것인가? 존재하

지만 존재하지 않는 하위주체들에 대한 지적인 혹은 제도적이거나 정치적인 응답은 무엇인가? 적어도 이들의 ‘존재’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존재에 대한 해석의 시도는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어떠한 답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민주주의는 적어도 무언가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4. 그들이 사라진 이유: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원리로서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법’의 이름하에서 제도화(institutionalisation)의 과정을 촉발시킨다. 사회 내 각종 기관, 관습, 표현, 개인/집단의 지위 등은 이 법적 제도의 지평 위에 배열된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법적 제도를 통해 그것의 사회적 영역을 형성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보편화’의 과정을 주목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가 법적 제도라는 ‘사회적 동의체제’로 구축될 때, 그것은 ‘국민/시민’ 혹은 ‘민주주의의 주체’라는 하나의 특수한 주체위치를 보편적이고 등가적인(equivalential) 위치로 부상시키면서, 사회 내 다양하고 상이한 주체위치들을 이 보편적이고 등가적인 위치 속에 고정시킨다. 이때 노동자, 자본가, 중산층, 민중, 농민, 주부, 동성애인, 빈민, 학생, 운동권, 범죄인, 탈북인, 이주 노동자, 장애인 등과 같은 상이한 주체위치들은 ‘국민/시민’이라는 보편화된 특수한 주체위치에 동일화되면서, 민주주의의 법적 질서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획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동일화(identification)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체위치들은 ‘국민/시민’이라는 보편성(universality)이 자신의 특수성(particularity)에

의해 더럽혀지지(contaminated) 않기 위하여 그 보편성을 부정하는 특수성의 잔여(leftover)를 제거해야 한다.⁵⁾

예를 들어, 자본가와 노동자는 ‘시민’ 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사회 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적대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위에서 나열한 주체 위치 모두는 ‘반공주의’ 에 동의하여야 하며, 분배적 정의가 상실된 대기업 중심의 발전주의적 국민동원 정책을 국가 간 경쟁을 위한 유일한 ‘민족적 생존’ 의 길로 간주하며 살기 위하여 각자에게 남아 있는 적대적인 잔여들을 철저히 은폐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잔여의 사회적 드러남이 억제당하고, 사회로부터 제거되어지는 지점이 바로 보편주의의 폭력이 발생하고 작동하는 장소인 것이다.

결국 보편주의의 이름으로 특정한 민주주의적·법적 제도를 사회 내에 설치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합의는 다름 아니라, 주체위치 혹은 사회적 정체성 간의 차이들을 민주주의적·법적 제도의 수준에 맞게 억제해야 한다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법적 제도의 수준이 ‘민주적으로’ 발전할수록 차이가 인정되어지는 수준 또한 발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반공주의’, ‘국가보안법’, ‘재벌중심의 자본주의적 생산구조’ 등과 같은 남한의 특이한 조건을 가지고서, 그러한 민주주의적 법적 제도의 수준이 한 단계 이상 발전되어지고 특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제도적 영

5) 우리는 물론 모든 차이가 보장되어지는 가운데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적대적이지 않고, 상호공존의 관계, 호혜적인 관계로 만드는 보편성에 기반한 사회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어쩌면 ‘해방의 정치’ 를 주장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이 가능성의 실현, 즉 그 차이가 보장되어지면서 공생의 관계를 유지하는 새로운 질서로의 도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언어적 유희와 전치라는 관념의 영역이 아니라, 적대적이고 피를 흘리는 투쟁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각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의 안과 밖의 세력 간의 갈등, 대립, 투쟁 속에서 엄청난 폭력과 피의 역사가 현실의 지평 위에 기록되어졌는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내적 동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존 민주주의 세력과 그것으로부터 배제되어진 ‘비민주주의적 세력’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민주화’란 바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진 것들이 투쟁을 통해서⁶⁾ 그것들이 승인(acknowledgement)되어지는 질서로 기존의 법적 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월 혁명 당시 ‘하위주체’ 들은 ‘도시 빈민’, ‘하층 노동자’, ‘무직자’ 등과 같은 계층분류적 개념들 속에서 인식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이름에서조차도 이승만 정권, 즉 아주 낮은 수준이긴 했지만, 기존 민주주의적·법적 질서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권위주의 질서에서 배제되었던, 그래서 그들의 존재성은 그저 ‘불편한’ 언술에 의해서만이 표상될(represented)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 이들은 사회의 실증적 질서에 묶여있던 자들이 그 질서의 보편성과 양립하기 위하여 폭력적으로 제거한 잔여였다. 즉, ‘하위주체들은 현존하는 민주주의적 질서에서 비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분류되었던 자들이며, 의미의 공간인 사회의 질서로부터 배제당했기 때문에 ‘잔여’라는 비유적 치환(topological substitution)을 통해서만 표상되어질 수 있었던 ‘이름없는 자들(‘the nameless’ or ‘the innomable’)(Paul de Man 1996, 59)인 것이다.

이 글의 앞 부분에서 언급했다시피, 탈구 혹은 탈구적 사건은 기존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질서를 뒤틀어 놓음과 동시에, 기존 질서에 고정되어 있는 대중들의 정치사회적 정체성들 또한 뒤틀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 뒤틀림들은 기존 질서가 수용할 수 없는 ‘결핍’을 드러낸다. 그 결핍이란 특히 ‘민주주의 주체’라는 획일화된 이름으로 개별자 각

6) 이것은 합법적인 것과 비합법적인 것 양자를 다 포괄한다.

각의 고유한 특이성과 차이를 ‘실증성’ 과 ‘보편성’ 이라는 이름으로 은폐하고 제거하였던 기존의 특정한 민주주의 질서가 더 이상 그 고유한 특이성과 차이를 감추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결핍은 기존 질서의 전복의 가능성과 함께 균열된 질서를 복원 혹은 재구성하려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출현 가능성을 보장한다. 따라서, 탈구는 단순히 기존 질서의 외상(trauma)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정체성의 구성을 위한 ‘자유, 일시성, 그리고 가능성’ 의 순간인 것이다(Laclau 1990, 41-45).

결과적으로, 탈구는 주체의 정체성의 전환을 촉발하고, 현존하는 질서의 전복과 새로운 질서의 구성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즉, 탈구는 전복과 구성의 이중적 특성을 가지며, 새로운 정치적 실천의 공간을 만들어낸다(Laclau 1990, 39).

문제는 탈구적 계기를 통해 가능해진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의 출현이 4월 혁명 당시(물론 다른 여러 정치변동의 계기에서도) 시위 성격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하위주체들과는 그다지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 당시의 혁명주도세력은 학생이었고, 언론, 담화문, 성명서, 격문 등에서 기술되는 이들의 조직적 저항행위와 언술은 곧 혁명 그 자체였다. 학생들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항세력이자 새로운 민주적 질서를 제시하는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수립된 제2공화국 시기, ‘평화통일운동’, ‘학원민주화운동’, ‘국민계몽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혁명 이후의 정치사회적 질서의 특징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4월 혁명 당시 사상자 분포 기록을 통해서 알려진 또 다른 주요 참여세력들, 즉 하위주체들의 경우 이들은 새로운 정치적 정체성으로의 전환은 말할 것도 없고, 제1차 마산시위가 발생한 3월 15일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한 4월 26일까지의 혁명기간 동안 이들 중 특정한 ‘우리들’ 이 발표한 성명서나 격문 등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

라, 이들의 존재를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그들의 직업명이 가끔씩 병기된 언론상 발표된 사상자 명단을 찾아보는 것이다. 4월 혁명 이후 학생들이 다양한 혁신적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주체로 급부상해갔던 반면(좀 더 거칠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조차 혁명 이후의 무기력한 정치적 상황에서 쿠데타를 4월 혁명의 계승과 완성으로 표현하면서 집권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대의명분을 대중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데 반해), 하위주체, 즉 정치적으로 스스로를 대표하지 못하는 기존 질서에서 가리워졌던 자들은 혁명 이후 재구성된 질서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가 아니라, 아무 변화없는 기존 신분으로 되돌아가버렸다.

구체제의 탈구와 함께 나타난 이 사회적 잔여들을 다시 사회의 경계선 밖으로 완전히 내몰고, 그들의 정치적 의미들을 제거하기 전까지, 지배 세력이 다시 구체제의 그들이든 혹은 새로운 엘리트 집단이든 간에, 이름 없는 자로서의 저 하위주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보호와 정치적 세력화가 보장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혁명 이후 다시 과거의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혁명 이후 1961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발발하기 전까지 1년 동안은 혁명의 여진 속에서 사회질서 내 헤게모니를 획득하고자 하는 세력들 간의 싸움일 뿐이었지, 다시 사회적 잔여로 돌아가버린 이름없는 하위주체들은 혁명 이후의 공간에서 넘쳐났던 ‘민주주의’ 라는 기표를 자신들의 사회적 생존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가치와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다.

이 시기 동안 통일운동, 노동운동 그리고 다양한 학생운동들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의미를 헤게모니적으로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하게 넘쳐나는 민주적 정치활동에서 ‘하위주체’ 들이 겹치지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4월 혁명을 촉발하고, 전개하고,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는 혁명의 과정 속에서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하위주체들을 드러내지도, 설명하지도, 제도적으로 승인하지 못했던 것이다. 참여자의 절반 이상을 ‘외면한’

민주주의는 그 외면당한 자들에게, 혹은 민주주의라는 기표를 통해 ‘인식되지 못한’ 자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이 상황을 민주주의 연구자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이러한 반성적 문제의식은 기존의 연구가 4월 혁명 당시 하위주체들의 존재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존재를 분석적 대상으로 삼지 못한 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마치며: 민주주의의 급진적 심급으로서의 ‘하위주체’

이 글은 4월 혁명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나, 향후 적용범위에 있어서 한국 정치변동 혹은 민주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참여자 연구의 중요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사실, 일련의 한국 민주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 ‘노동자’, ‘시민’ 과 같이 집단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참여자들은 민주화의 일정한 수혜자가 된 반면, ‘하위주체’의 주된 지시대상인 도시빈민, 빈농, ‘공돌이’, ‘공순이’, 부랑아, 백수, 기지촌여성, 소매치기, 양아치, 날품팔이 등 무정형의 참가자들은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한 채, 종래의 삶의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후자가 민주화의 수혜자로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은 한국 민주화의 과정이 ‘시민’이라는 이미 제도적으로 승인된 주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라는 협소한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화의 심화와 보다 엄격하고 직접적인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하위주체’를 더욱더 다양한 형태로 분화시키는 현상은 현재의 민주적 질서가 다원화된 ‘하위주체’를 그 질서 내부로 포섭하고 승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전환을 취하도록 한다.

또한 이 글은 4월 혁명에 대한 분석이라는 외형적 틀을 유지하고 있으

나, 문제의식은 ‘하위주체’를 ‘민주적 잔여’, ‘이름없는 자’, ‘인식되지 못한 자’, ‘스스로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자’ 등의 용어와 등치시키면서 정치분석의 대상으로 복원시키고, 정치변동 분석에 적용시키고자 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위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모색하고, ‘하위주체’를 둘러싼 사회적 의제들을 제도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지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문학이나 사회학 등의 학문에서 하위주체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이야기와 연구가 가능하지만, 정치학에서 ‘존재’만으로 정치적 의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정치학의 측면에서 특정한 것의 ‘존재’가 인식되는 순간 그것은 관계론적 차원에서, 나아가 정치적 차원에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학의 영역에서 ‘하위주체’를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수밖에 없으며, 하위주체를 인식하지 않은 기존의 분석틀 혹은 방법론에 대한 일정한 도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어려움과 복잡함 속에서, 이 글은 많은 한계를 가진 시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향후, ‘하위주체’에 대한 보다 정치·이론적인 연구와 이에 기반한 보다 미시적이고 역동적인 4월 혁명에 대한 연구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면서, 이 글의 시도가 민주주의와 관련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향후 민주주의 연구를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위주체’를 언급하고 끌어내는 것은 비단 정치 사회질서의 한계만이 아니라, 기존의 지배적인 지적, 윤리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담론질서 또한 불편하게 할 것이다. ‘하위주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연구는 ‘차이의 승인’, ‘제도화의 확대’, ‘대표성의 문제’, ‘배제와 폭력’, ‘민주주의 주체의 재구성’ 등 여러 주제들과 관련된 논의들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글은 소위 민주주의의 공고화의 단계로 분류되는 현 시기에서의 하위주체들의 존재방식, 운동양태 그리고 향후 전망 수립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 연구발전의 기여는 반대로 하위주체들의 향후 전망의 밑그림, 즉 더 이상 하위주체의 범주에서 인식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존가능한 새로운 정치적 주체성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다~~

참고문헌

- 4월회 편. 2000. 『4·19혁명 자료목록집』. 서울: 사월회.
- 91년 5월투쟁 청년 모임 편.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 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서울: 이후
- 김성환. 1984. “4·19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 『1960년』. 거름.
- 김성환 외. 1984. 『1960년대』. 서울: 거름.
- 김운태. 1975. 『해방삼십년사 제2권 제1공화국』. 한국사료연구소 편.
- 김 원. 2006. “박정희 시기 도시하층민: 부마항쟁을 중심으로.” 『근대의 경계에 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 김정한. 1999. 『대중과 폭력: 1991년 5월의 기억』. 서울: 이후.
- 김정화. 2005. “1960년대 기혼여성의 노동: 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5호 (2005. 12). 63-100.
- 김택현. 2003. 『서발턴과 역사학 비판』. 박종철 출판사.
- _____. 1998. “서발턴연구에 대하여.” 『역사연구』 제6호. 261-269.
- 모튼 스티브, 이운경 역. 2005. 『스피박 넘기』. 엘피.
- 박찬호. 1991. “4월민중항쟁과 민족민주운동의 성장.” 『한국현대사 2』. 풀빛.
- 슬라보예 지젝. 1995. 『빼딱하게 보기(Looking awry)』. 김소연 역. 시각과 언어.
- 안토니오 그람시, 이상훈 역. 1992. 『그람씨의 옥중수고, I, II』. 거름.

- 오창은. 2004. “1960년대 도시 하위주체의 저항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이문구의 도시 소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12집(2004. 2). 67-98.
- 우석균. 2005. “라틴아메리카 하위주체 연구의 기원, 쟁점, 의의.” 『실천문학』, 2005년 여름호, 320-343.
- _____. 2000. “주변부적 근대성과 라틴아메리카 지식인 패러다임.” 『世界地域研究論叢』 통권 제15호(2000. 12). 29-42.
- 이성훈. 2003. “중남미 하위주체 연구그룹의 성과와 한계.” 『라틴아메리카연구』, 제16권 제2호(2003. 12). 491-503.
- 이승원. 2002. “91년 5월투쟁과 민주주의 - 한국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시론.”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91년 5월투쟁 청년모임 펴냄. 서울: 이후.
- _____. 2008. “민주주의와 헤게모니: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에 관한 이론적 재검토.” 『비교민주주의 연구』 4(1). 67-108.
- 이정식. 1975. 『해방삼십년사 제3권 제3공화국』. 한국사료연구소 편.
- 임지현. 2002. “민중, 희생자인가 공범자인가: 파시즘의 진지전임 ‘합의독재.’” 『당대비평』 가을호, 24-45.
- 임지현 · 김용우 편. 2004. 『대중독재: 강제와 동의 사이에서』. 서울: 책세상.
- 전재호. 2004. 『91년 5월투쟁과 한국의 민주주의』. 서울: 민주화기념사업회.
- 전철환. 1983. “4·19혁명의 사회 경제적 배경.” 한완상 외. 『4·19혁명론』 I. 서울: 일월서각.
- 정용욱. 1998. “이승만정부의 붕괴(3.15-4.26): 이승만정부의 대응 및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4: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정부의 붕괴』. 서울: 오름.
- 정창현. 2006. “4·19. 민주주의 혁명인가?” 『기억과 전망』 16호, 봄호, 27-44.
- 조희연. 2004. “반공규율사회와 노동자 계급의 구성적 출현.” 『당대비평』 (여름호).

- 존 비버리. 안준범 역. 2003. “바바에서 구하로: “민중” 범주의 현재성.” 『트랜스 토리아』 제3호. 48-71.
- 태혜숙. 1997.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3권 1호. 1-27.
- 학민사 편집실 편. 1984. 『4·19의 민중사』. 서울: 학민사.
- 한국민중신학학회. 1995. 『민중신학』.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 연구반. 1991. 『1950년대 한국사회와 4월 민중항쟁』. 서울: 풀빛.
- 한상진. 1990. “4·19혁명의 사회학적 분석.” 『계간사상』 봄호. 224-257.
- 한완상 외. 1983. 『4·19혁명론 I, II』. 서울: 일월서각.
- 『경향신문』, 1960년 3월 13일~ 4월 30일.
- 국회 3·15 마산시위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속기록.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 Anderson, Benedict. 1991 (1983).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 Ball, T., J. Farr, R. Hans. 1989. *Political Innovation and conceptual change*. Cambridge: CUP.
- Benhabib, Seylia, ed. 1996.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uci-Glucksmann, Christine. 1979. “State, Transition and Passive Revolution.” In Mouffe, ed. *Gramsci and Marxist Theor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utler, Judith, Ernesto Laclau, & Slavoj Zizek. 2000. *Contingency, Hegemony, Universality: Contemporary Dialogues on the Left*. London: Verso.
- Dahl, Robert A. 1998. *On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 Foucault, Michel. 1984. “Nietzsche, Genealogy, History.” Paul

- Rainbow, ed. *The Foucault Reader*. Harmondsworth: Penguin.
- _____. 1977.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Alan Sheridan, trans. New York: Vintage.
- Gramsci, Antonio. 1978.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 Quintin Hoare and Geoffery Nowell Smith, eds. and tran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Grugel, Jean. 2002. *Democratisation: a critical introduction*. Hampshire: Palgrave.
- Guha, Ranajit. 1999. *Elementary Aspects of Peasant Insurgency in Colonial India*.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1997. *A Subaltern Studies Reader, 1986-1995*.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_____. 1988. *Selected Subaltern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Su `ngju. 1974. *The Failure of Democracy in South Kore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enderson, Gregory. 1968.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Holifield, James F., and Calvin Jillson, eds. 2000. *Pathways to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London: Routledge.
- Howarth, David. 2000. *Discourse*. London: Verso.
- Kim, Quee-Young. 1983. *The Fall of Syngman Rhe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Centre for Korean Studies.
- Laclau, Ernesto. 1996. *Emancipation(s)*. London: Verso.
- _____. 1990. *New Reflections of the Revolution of Our Time*. London: Verso.
- _____. 1985.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 Radical Democracy, with Chantal Mouffé*. London: Verso.
- Latin American Subaltern Studies Group. "Founding Statement." *Boundary 2*, Vol. 20, No. 3, pp. 110-121.
- Lefort, Claude. 1988. *Democracy and Political Theory*. David Macey, trans. London: Polity Press.

-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 Ogle, George E. 1990. *South Korea: Dissent within the Economic Miracle*. London: Zed Books.
- Oh, John Kie-Chaing. 1968. *Korea: Democracy on Trial*, Ithaca. New York: Cornell Univ. Press.
- Paul de Man. 1996. "Pascal's Allegory of Persuasion." In *Aesthetic Ideology*. Minneapolis and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assoon, Anne Showstack. 1982. "Passive Revolution and the Politics of Reform." In Sassoon, ed. *Approaches to Gramsci*. London: Writers and Readers Publishing Cooperative Ltd.
- _____. 1979. *Nationalism in the Twentieth Century*. Oxford: Martin Robertson.
- Spivak, Gayatri C. 2007. *Other Asias*. Malden: Blackwell.
- _____. 2003. *Death of a Disciplin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 1999. *A Critique of Postcolonial Reason: Toward a History of the Vanishing Pres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93.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 _____. 1990. *The Post-Colonial Critic: Interviews, Strategies, Dialogues*. New York: Routledge.
- _____.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eds.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Cultur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71-313.
- _____. 1987. *In Other Wor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Sallybrass, Peter. 1990. "Marx and Heterogeneity: Thinking the Lumpenproletariat." In *Representations* (Special Issue: The Margins of Identity in Nineteenth-Century), no. 31, Summer.
- Torfig, Jacob. 1999. *New Theories of Discourse: Laclau, Mouffe and Zizek*. Oxford: Blackwell.

Zizek, Slavoj. 1991. *Looking Awry: An Introduction to Jacques Lacan through Popular Culture*. Cambridge: MIT Press.

투고: 2009.3.25 심사: 2009.3.30 확정: 2009.4.30